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지역상담소 조례' 본회의 상정 미뤄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세금낭비 지적' 지역상담소 운영 조례안 상정 보류	1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40명 위촉	2
江原日報		강원자치도의회 1기 의정모니터 위촉	2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	3
KBS	온라인	강원도의회 첫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3
충청MBC	온라인	도의회, 의정 모니터 40명 선정해 위촉	4
연습뉴스		[의회소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모니터 40명 위촉	4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도당 '박정하 체제' 출범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으로..."	5
江原日報	03면	"대선·지선 승리 기세 모아 총선도 압승"	5
江原日報	03면	"도내 의료진 이탈 막을 공공의료정책 수립 시급"	6
강원도민일보	02면	질문에 답변하는 신경호 도교육감	6
강원도민일보	02면	전 "김 지사, 듣기 싫은 말 하는 분 가까이 두라" 김 "비리 ...	7
연습뉴스		도의원 "김진태 도정 1년 낙제점" 지적에 "최문순도 평가하..."	8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농수위-생활개선포럼 간담회	9
세계타임즈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한국생활개선포럼...	9
전국매일		강원도의회, 수복지구 주민들 재산권회복 나선다	10
신아일보	온라인	전찬성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업체 생산 물품 구매 외..."	11
세계타임즈	온라인	전찬성 의원,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총체적 난맥"	12
LG헬로비	온라인	전찬성 도의원, 축제 바가지 상술 근절 위한 대책 촉구	13
강원신문		태백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성황리에 개막	14
강원도민일보	02면	오늘 도청 인사발령... 국장급 인선 현안해결·업무분산 초점	15
강원도민일보	01면	민선7기 현안사업 고발·감사... 전-현 지방정부 충돌	15
江原日報	01면	산사태 취약지 정보... 정작 주민에겐 '쉬쉬'	16
江原日報	02면	도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 8곳 모두 출입 통제시설 없어	16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데이터산업 추진협의회 발대	17
江原日報	03면	"GTX-B 춘천 연장·철원~연천 전철화 제5차 국가철도망 ...	18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철원서 또 ASF 확진 '비상'	19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 100년 역사 담긴 '망대' 역사 속으로	19
강원도민일보	11면	이·통장연합 도지부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지지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릉시 관광·신산업 거점 기대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구조 자격 없는 안전요원, 안전불감증 아닌가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경제성 입증 GTX-B 춘천 연장, 국비로 추진해야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산사태 1%의 가능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	24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3면

도의회 '지역상담소 조례' 본회의 상정 미뤄

추가 의견 청취·숙의 거치기로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본보 19일자 2면 등 보도)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19일 회의를 통해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18

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민원상담관을 위촉해 지역 민원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원 개 인사무소로 변질될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숙의 과정을 갖기로 합의했다. 권혁열 의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심영곤 위원장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숙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2면

도의회 '세금납비 지적' 지역상담소 운영 조례안 상정 보류

권 의장 "여론수렴 공감대 형성"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세금납비' 지적(본지 7월 7일자 4면 등)이 일었던 지역상담소 운영 조례를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19일 결정했다. 권혁열 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조례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며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조례 미상정 사유를

밝혔다. 심영곤 위원장은 "필요한 정책인데, 공감대형성을 못하는 것 같다"며 "왜 필요한지 도민들에 설명하고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3면



강원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40명 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갖고 의정모니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된 의정모니터 40명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7월 19일 (수)

종합

강원자치도의회 1기 의정모니터 위촉

의정모니터 위촉식 19일 개최
“의견수렴 통해 열린 의정 구현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권혁열)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갖고 의정모니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된 의정모니터 40명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도정·의정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방청 등 의정활동에 참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권혁열)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서는 의정모니터 제도가 안내됐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정 활동을 이해하고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됐다.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강원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지난달 11일 시행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59명이 지원했고 심사를 통해 40명을 선정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주신 좋은 의견과 제안이 열린 의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실천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인물 22면



도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이 19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모니터는 총 40명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된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년 07월 19일 (수)
사회



강원도의회 첫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KBS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이 구성돼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9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정모니터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첫 의정모니터단은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조례의 제정과 폐지 건의와 민원 수렴, 도의회 의정 활동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춘천MBC

2023년 07월 19일 (수)
강원

도의회, 의정 모니터 40명 선정해 위촉

강원도의회가 의정 모니터
위촉식을 갖고, 40명의
모니터단을 위촉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59명의 지원자 가운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0명을 최종 선정했다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회의 기능과 의정 활동을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모니터는
도정과 의정에 대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방청 등
의정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모니터단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합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2023년 07월 19일 (수)
지역 연합뉴스

[의회소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모니터 40명 위촉

[의회소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모니터 40명 위촉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의정 모니터 40명 위촉식을 했다.
의정 모니터 주요 역할은 의정·도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 사항 건의,
조례·규칙 제·개정과 폐지 등 자치입법 관련 건의, 의정활동과 현안 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이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총 1년이다.
도의회는 위촉식 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소개
했다.
권혁열 의장은 "의정 모니터가 주신 좋은 의견과 제안이 열린 의정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끝)

기타 신아일보, 정필 등 46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3면

국힘 도당 '박정하 체제' 출범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으로"

박 국회 입성 1년만에 총선 총괄
운영위원 "총선 필승"한 목소리
도당 유상범 전 위원장에 감사패

제22대 총선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박정하 체제'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낸다. 박정하 신임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상범)는 19일 춘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유상범 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마쳤다. 운영위는 지난해 유 위원장을 재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정당의 기틀을 마련



19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도당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정하 신임 도당위원장이 유상범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호

하겠다"며 "힘든 일은 앞장서서 하고, 좋은 일은 뒤에서 박수치는 도당위원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국회 입성 약 1년 여만에 도당위원장을 맡아 강원 총선을 총괄

하게 됐다.

2년 임기를 수행한 유상범 위원장은 "지난 2년 당원 동지의 협력이 있어 대선, 지선 승리가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위원장 역할이 엄중하고, 지역사회 주시를 받는 자리여서 어깨가 무거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된 국정을 펼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그

날까지 함께 가자"고 했다.

도당은 "사상 최대 강원도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며 유 위원장에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내 부분열이 되지 않는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며 "선배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재 흥천군수는 당원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유 위원장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주면서 강원도 보수가 튼튼하게 자리잡았다"며 "내년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자"고 했다.

권혁열 도의회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강원도 8석 압승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김진호·정선자·박희순·정호조·박길선·이재용·김원석·신도현 부위원장, 방중현·박기영·손영운 전국위원,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박상수 삼척시장, 김명기 횡성군수, 신영재 흥천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김혜란·이미옥·황용진·전용길·최성현·이영욱 등 도당 상설위원장, 권혁열 도의장, 박찬홍 도의회 원내대표,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 운영위원 62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3면

/ 국민의힘 강원자치도당 박정하 위원장 선임 /

“대선·지선 승리 기세 모아 총선도 압승”

“무의미한 정쟁 빠지지 않고
민생과 가까운 ‘정책’ 승부”
유상범 前 위원장에 공로패

“대선, 지선 승리 기세 이어
총선에서도 압승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19일 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날 당원들은 박정하 신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결의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모두 힘을 모았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지사를 배출했고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수권정당이 됐는데 이 기세를 모아 총선에서도 압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의미한 정쟁에 빠지지 않고 민생과 가까운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든 길은 앞장서고 좋은 일은 뒤에서 박수 치는 도당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9일 도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박정하 위원장과 유상범 전 위원장, 노용호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도의원, 당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도당위원장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은 당원 동지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

장)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과 결속으로,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며 “내년 총선에서 당원들이 똘똘 뭉쳐 강원 자치도 8석 압승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이날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유상범 도당위원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운영위원회에는 김진호·

정선자·박희순·정호조·박길선·이재용·김원석·신도현 부위원장, 방중현·박기영·손영운 전국위원, 김혜란·이미옥·원선녀·나윤선·김필수·조용기·황용진·이범연·전용길·최성현·윤봉길·황경화·이영욱·유호규 도당 상설위원장과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찬홍 도의회 원내대표, 박상수 삼척시장, 신영재 흥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3면

“도내 의료진 이탈 막을 공공의료정책 수립 시급”

도의회 본회의서 대책 촉구
전찬성 도의원-김진태 지사
도정 평가 놓고 날선 공방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진 이탈과
기피 현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
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순옥(국힘·비례) 의원은 19일 열린 강원자치도의회 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명감만으로 (의료진에게) 지역에서의 근무를 요구하기에는 무리”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 수립을 통해 도민들이 더 이상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승기 도 보건체육국장은 “MZ세대 등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소도시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사 파견 제도나 대학병원과 연계한 임상교수 파견 제도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태 도정 평가를 놓고 전찬성(더민주·원주) 의

원과 김진태 지사의 공방도 있었다.

전 의원은 “도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결단코 좋은 점수를 줄 수만은 없다”며 “레고랜드 채무 2,050억원 지급보증 불이행 돌발 선언은 금융 당국에서까지 진화해야 하는 파장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김지사는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종국에는 사과까지 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데에는 보좌직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질문 당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다 이어진 박찬홍(국힘·춘천) 의원의 차례에 발언을 하게 된 김지사는 “전 의원께서 16분30초간 질의하는 동안 답변자로 나선 행정부지사는 답변 시간을 단 10초밖에 받지 못했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지난

도정은 지금까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 도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도의원으로서 지난 도정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찬홍 의원은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층 등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강원도형 공공주택 3,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양숙희(국힘·춘천) 의원은 “현재 급식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크다”며 “급식시설 개선협의회(TF)를 빨리 구성하고 급식조리원들과 교육청 당국자, 환기시설 전문가,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2면



질문에 답변하는 신경호 도교육감 1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강원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양숙희 의원의 질의에 신경호 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2면

전 “김 지사, 듣기 싫은 말 하는 분 가까이 두라” 김 “비리 수사 받는 전임 도정도 평가해야 공평”

도의회 김진태 도정 1년 주제 질의
전찬성 의원-김 지사 대립각 세워

더불어민주당 소속도원이 김진태 지사를 향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을 가까이 두라”며 각을 세웠다.

이같은 발언은 산불이 빈번하던 지난 3월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간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주말이었고, 개인시간이었다’고 해명한 김 지사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전찬성(원주) 의원은 19일 제3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진태 지사 도정 1년 평가’를 주제로 도정 질의에 나서 “올바른 보좌 직원이라면 골프를 좋아하는 지사에게 도지사 재임 중에는 골프를 자제하라는 직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을 두고는 “보좌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보좌진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 지사의 독선”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다른 의원의 답변 시간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차



전찬성



유순옥



양숙희



박찬홍

라리 저에게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답변을 한) 행정 부지사는 의원이 16분 30초를 질의하는 동안 내내 서서 듣다가, 답변시

간을 10초밖에 얻지 못했다”며 “지난 도정에서 (전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다 만취해서 실신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 “(최문순 전 지사가) 4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 도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도 부탁을 드리겠다. 그게 공평하다”고 맞받아쳤다.

유순옥(비례) 의원은 도내 1인가구 고독사를 언급하며 “1인가구 발굴사업, 춘천과 강릉의 이웃 돌보미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통계가 필요

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숙희(춘천) 의원은 도내 학교 급식노동자의 급식인원과 업무량에 대한 배치기준표를 하향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춘천시의 세월교 철거 결정을 두고 “세월교 상태 평가를 일회성으로 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거를 위한 판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홍(춘천) 의원은 “네이버, 더존비즈온 등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1년 지방세가 100억 정도 된다”며 “고용효과는 기대에 못미치지만, 세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도내 데이터센터 유치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당부했다.

이설화·김덕형



2023년 07월 19일 (수)

지역

도의원 "김진태 도정 1년 낙제점" 지적에 "최문순도 평가하라"

전찬성 "보좌진 책임도 커"...김진태 "전임 도정 비리에 부담"

도의원 "김진태 도정 1년 낙제점" 지적에 "최문순도 평가하라"
전찬성 "보좌진 책임도 커"...김진태 "전임 도정 비리에 부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도정질문에서 민선 8기 강원도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자 김진태 지사가 "전임 도정부부터 평가하라"고 맞불을 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찬성(원주8) 의원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김지사는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종국에는 사과하기까지 했다"며 "결단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간 사례를 들어 "본분을 망각한 채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간 것도 모자라 그날 저녁에는 지인들과 술자리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까지 촉발시켰다"고 했다.

석연치 않은 연가 신청 정황도 언급하며 "도지사로부터 구두로 연가 신청을 전달받은 직원은 누구인지, 이번 일에 연관된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레고랜드 채무 2천50억원 지급보증 불이행 시사 발언은 금융당국에서까지 진화해야 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며 "도지사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데에는 보좌직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질문 당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김 지사는 국민의힘 박찬홍(춘천7) 의원의 질문 차례에 답변자로 나서서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차라리 저에게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전 의원께서 16분 30초간 질의하는 동안 답변자로 나선 행정부지사는 답변 시간을 단 10초밖에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그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주 사실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말하자면 지난 도정에서는 지사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다가 만취돼서 실신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지금까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도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도의원으로서 지난 도정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문했다.

conanys@yna.co.kr

(끝)

기타 명성일보, 시사일보 등 25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인물 21면



도의회 농수위-생활개선포럼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김용복) 위원들은 19일 도의회에서 한국생활개선포럼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세계타임즈

2023년 07월 19일 (수)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 한국생활개선포럼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김용복) 위원들은 7월 19일(수) 제321회 임시회 회기 중 한국생활개선포럼연합회와의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개최, “한국생활개선포럼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기타 문화매일, 시사일보 등 26개 언론사 보도

전국매일

2023년 07월 19일 (수)

정치

강원도의의회, 수복지구 주민들 재산권회복 나선다

춘천/ 이승희기자

21일 도의회 소속의원 전원명의 특별조치법 촉구 건의문 채택 예정



강원도의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21일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은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등기부의 멸실, 권리관계자들의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간편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4차례의 법 제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20년 제4차 제정의 경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함으로써 강원지역을 비롯한 수복지역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 강원지역의 관계자들이 2020년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개정 노력해 왔으나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2년의 법률 시효가 만료돼 법안 자체가 폐지된 상태이다.

엄기호 도의원(철원2)이 주도한 건의문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할 것, 적용대상에 수복지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지역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 발표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기타 세계타임즈, 뉴스줌 등 33개 언론사 보도

2023년 07월 19일 (수)

지역

신아일보

전찬성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업체 생산 물품 구매 외면"

김정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에서 구매한 조달청 입찰 3억3천만원 이하 및 조달청 쇼핑물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총액은 2018년 54억4천878만3천원에서 2019년 38억963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이래, 2020년 40억19만2천원, 2021년 36억5천894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9억5천817만5천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밖, 즉 역외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비중은 2018년(34억251만6천) 62%에 이어 2019년(16억4천591만5천원) 43%, 2020년(27억4천848만4천원) 69%, 2021년(23억1천174만원) 63% 수준을 보이다가 '김진태 도정'이 출범한 2022년(24억8천312만9천원)에는 무려 84%까지 치솟았다.

특히 물품 구매 시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3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도내 생산 물품 구매액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시작 원년인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계약한 조달청 입찰 3억3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액을 살펴보면, 도내 제품은 고작 3억1천79만1천원인데 비해 역외, 즉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구매액은 무려 10억465만6천원으로 전체의 76%를 역외 업체에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역외 기업 제품의 물품 구매액 비중이 가장 큰 것이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나라장터종합쇼핑몰 5천만원 미만 물품 구매액도 이와 비슷한 추세 흐름을 보였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나머지 대기업 등이 생산한 일반제품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단계 경쟁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도내 생산 제품일 경우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인지, 일반제품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자료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제출된 자료 중 나라장터종합쇼핑몰 1억원 이하는 충분히 중소기업 경쟁제품이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19일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런 가정 하에 지난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1억 이하 물품 구매액은 도내 1억6천425만5천원에 그친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밖, 즉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려 14억7천847만3천원에 달했다"면서 "이는 강원 기업 비중 10%, 다른 지역 90%로, 동일한 가격 기준으로 도내 생산 물품을 1개 구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9개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부터 관급 구매를 확대해, 지역에 돈을 더 많이 풀게 되면 지역 기업들이 살찌고, 결국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상위 법령과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제한을 하거나 지역 업체가 만든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 달서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도내 기업도 못 챙기는데 어느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오겠냐. '대어(大魚) 잡으려다 멸치도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기타 정도일보, 누리일보 등 28개 언론사 보도

2023년 07월 19일 (수)
지역

세계타임즈

전찬성 의원,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총체적 난맥”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정관을 어긴 채 센터장을 기용하는가 하면 수입·지출 결산상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물론 수익 사업보다는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에 따르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월22일 설립 이래 1년 단위로 4명의 센터장을 교체 기용했고, 이들 모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4급 과장 직무대리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지역 혁신 또는 기업 성장 지원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 상의 자격 요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센터 정관 상 센터장 자격 요건은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최고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법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센터장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전 의원은 7월19일(수)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으로 자체 4급 과장 직무대리인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다”면서 “센터 규정을 어긴 채 1년 단위로 벌써 4명을 기용했고, 현(現) 센터장도 올 연말까지 임기를 끝으로 본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지출 결산 상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센터 설립 이래 연도별 불용액은 2020년 1억8천252만5천670원, 2021년 3억8천227만2천330원, 2022년 10억5천839만5천430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월액 또한 2억294만3천550원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에 따른 지출 예산 대비 불용액 비중은 2020년 33%,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8%와 27%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결산 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 계상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면 분식회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자립화를 위한 수익 사업 발굴보다는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기업입주시설 67실 가운데 61실만 입주해 6개실이 공실 상태”라며 “공유오피스 또한 15개실 중 6실이 공실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 역시 2개실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자립 경영을 위해선 도 위탁사업 의존형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역할은 물론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아울러, 정주 환경 개선 지원 등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강화하고 경영 자립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화매일, 시사일보 등 26개 언론사 보도

2023년 07월 19일 (수)

정치

LG헬로비전지역방송

전찬성 도의원, 축제 바가지 상술 근절 위한 대책 촉구

박건상 기자



자료사진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최근 지역축제의 바가지 상술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와 강릉단오제에서 불거졌던 축제 바가지 논란의 대상은 대부분 외지 이동 상인들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축제 주최 측이 외지 이동 상인에게 부스를 비싸게 파는 관행을 버리기 위해 도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 camerabag@lghv.net

기타 뉴스쑈, 한국제일신문 등 25개 언론사 보도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년 07월 19일 (수)
지역

태백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성황리에 개막

황미정 기자

이상호 태백시장(사진)은 “태백에서 멋진 추억과 경험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백시와 강원도소방본부가 함께하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지난 18일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태백시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지난 18일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캠프는 재난에 대비한 생존수영, 수상구조, 소방관과 함께하는 주택 화재 진압 훈련, 캠프파이어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전국의 청소년 1,300여 명을 기다리고 있다.



태백시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지난 18일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김현중 대한소방안전교육 문화협회 이사장,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캠프”라며, “태백에서 멋진 추억과 경험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미정 기자 gwnews@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오늘 도청 인사발령...국장급 인선 현안해결·업무분산 초점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2면

강릉2청사 3개 국장 자리에
곽일규·현준태·최우홍 유력
도의회 사무처장에 박용식

강원특별자치도 본청과 강릉2청사 국장급 이동을 포함한 강원도 정기인사안이 하루 앞당겨 20일 발표되는 가운데 국장급 그룹 이동 윤곽이 드러났다. 도 본청과 오는 24일 개청하는 강릉 소재 글로벌본부 2청사로 발령되는 국

장 그룹은 현안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본청과 2청사 업무분산을 통한 균형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인사안의 최대 관심은 도청 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2청사 조직에 쏠렸다. 2급 글로벌본부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정책관 체제다.

글로벌본부장은 정일섭 행정국장이 확정됐다. 2청사 미래산업국장은 곽일규 정책기획관이 유력하다. 3급으로 승진한 각 기획관은 2청사 3개국 가운데

선임 국장 역할을 하게 된다. 관광국과 해양수산국은 국장급 승진자로 진용이 갖춰졌다. 관광국장은 현준태 자치행정과장, 해양수산정책관은 최우홍 예산과장이 유력하다.

2청사는 첨단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분야를 두루 아우르며 김진태 지사의 영동권 공약을 비롯해 도 본청과의 현안 업무 협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나 서게 된다.

2청사 인사안을 중심으로 도 본청 국장 그룹 수평 이동안도 틀이 잡혔다.

행정국장은 양원도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도의회 사무처장이 물망에 오른다. 정책기획관은 3급으로 승진한 문영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기용 경제국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 국장 유임을 통해 강원경제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정국장은 석성균 친환경농업과장이 확정됐다. 복지보건국은 이경희 복지국장, 문화체육

국은 윤승기 보건체육국장의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의회 사무처장엔 2급으로 승진한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이 확정됐다. 박 국장은 도의회 차원의 특자도법 대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자치국장 역시 국장급으로 승진한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이 업무연속성을 이어가는 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국장 1석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희성 국장은 복귀한다.

박지은 pje@kado.net

강원도민일보

민선 7기 현안사업 고발·감사...전-현 지방정부 충돌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1면

민선 7기 현안사업 중지 잇따라
도 드론택시 관련 형사 고발
태백시 오투 관련 전 시장 고발
춘천시 축제 부실 경찰수사 의뢰
민선 8기 각종 사업 재검토 진행

민선 8기 집권 2년차를 맞은 가운데 전임 도청과 전임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현안들이 수사기관 고발 및 감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충돌하고 있다.

19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민선 7기-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주요 현안의 경우 김진태 도정은 최문순 전임 도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3개 현안이 거론된다.

이 사업과 관련, 도감사위는 이달 초에 강원경찰청에 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을 수사의뢰했다. 또, 강원테크노파크는 시제가 개발 사업을 전담한 수도권 소재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춘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드론택시 사업은 도비 100여원을 투입하고도 환수가 불투명, 해당 사업을 추진한 도청 공무원들의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혜 의혹을 낳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도감사위가 사건진행 가운데 감사위는 최 전 지사와 사업 관련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전임 시장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감사 및 고발 등이 이뤄지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춘천시에선 르네상스사업단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 춘천시가 감사를 진행했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축제 운영 내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시는 지급된 보조금 일부가

전·현(민선 7기-민선 8기) 지방정부 충돌 현안

강원특별자치도

-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 열세 논쟁
-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기초지자체

- 춘천시 르네상스사업단 부실 운영 논란
- 원주시 문화도시사업 부적정 수의계약, 보조금 등 수사 의뢰
- 원주시 반곡-금대관광활성화 공익감사 청구
- 태백시 오투리조트 기부금(150억원) 배상금 지급 전 전임 시장 고발

허위사유 보고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춘천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에 관한 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19일 회의를 열고,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원주시는 민선 7기부터 시행된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정 운영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특정감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계약업무 부적정, 예산 집행 및 계약 추진 부적정 등은 물론 센터 설립 계획 부적정 등 총체적 업무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반곡-금대관광활성화 사업은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원주를 지키는 청년회는 "특정인, 특정업체

에 대한 특혜 부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306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태백시는 전임 시장을 고발했다. 민선 7기 태백시장에서 이뤄진 오투리조트 기부금(150억원) 배상금 지급 건 관련이다. 시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류태호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 지역사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민선 7기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8기 들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지은·지역종합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1면

江原日報

산사태 취약지 정보... 정작 주민에게는 ‘쉬쉬’

도내 2,933곳 지정 불구 영향권인 마을 목록은 ‘공개 불가’
산주에게만 통보돼 해당 지역민은 ‘금시초문’... 공유 필요
도 “재산 피해 민원 우려 탓... 산림청 시스템서 확인 가능”

강원지역에 2,933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지만, 정작 해당 마을 주민들은 지정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19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1차 전문가 조사와 2차 시·군 조사를 거쳐 매년 지정되며 그 결과는 ‘산주’에게 통보된다. 시·군 홈페이지에 이번이 고시될 뿐, 마을이장 등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마을 단위 재난 대응 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영향권에 있는 마을 목록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공개됐을 경우, 집값 하락 등 재산 피해를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며 “취약지 지정을 위한 1, 2차 조사 때 이장 등도 대면 조사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산사태 취약지역별 대피소(마을회관, 학교 등)를 확인하면 해당 마을이 취약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에게는 ‘깜깜이 운영’일 뿐이다. 삼척시 원덕읍 사

곡리의 경우 ‘사곡리 마을회관’이 산사태 취약 지역 대피소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김동화 사곡리 이장은 “우리 마을이 산사태 영향권에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주민들이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데 최소한 이장에게는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인동 홍천군 내면 자운2리 이장도 “마을회관, 경로당이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로 지정된 것을 처음 알

았다”며 “산사태 위험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등이 궁금한데 주민들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북 산사태 피해에서도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난 대비 중요성이 확인됐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취약 지역 지정 결과는 주민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재난 정보”라며 “마을에도 적극 알리고, 이장을 중심으로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2면

江原日報

도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 8곳 모두 출입 통제시설 없어

반복되는 침수 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지적
시군 차수막·차단시설 설치 검토 등 대응 움직임

강원지역 지하차도 8곳 가운데 지난 시 출입을 막을 통제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최근 청주 오송 공평2 지하차도 등 반복되는 침수 사고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강원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원지역

에서 관리 중인 지하차도는 총 8곳으로 원주 3곳, 춘천, 강릉, 속초, 태백, 철원 각 1곳씩이다. 이 중 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난 시 출입 통제시설을 갖춘 지하차도는 단 한 곳도 없다.

강원지역 지하차도 중 3곳은 국토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며 나머지 5곳은 시(市)도로 기초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진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원격으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나마 춘천역 지하차도는 올해 안전점검에서 A등급, 강릉 입암지하차도는 B등급을 받았으며 원주 단계지하차도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진입 통제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로 밝혀진 것을 고려하면 강원지역 지

하차로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송 지하차도 역시 침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강원지역 지하차도의 안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지역 지하차도는 자연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군의 안전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춘천시

의 경우 춘천역 지하차도에 대한 출입 통제시설 설치 검토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시 입구를 차단하는 시설과 물을 막는 차수막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시설 부서에서 지하차도 CCTV 관제를 맡고 있지만 CCTV를 증설해 도로 부서에서도 관제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경찰에도 출입 통제 요청 시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데이터 산업 수도!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 데이터산업 추진협의회 발대식이 19일 강원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자치도 데이터산업 추진협의회 발대

규제 개선 등 정책 지속 발굴·기획 예정
공동위원장에 최용 인컴즈 자문역 선출

‘데이터 산업 수도!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 데이터산업 추진협의회 발대식이 19일 강원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데이터산업 추진협의회는 전문가의 자문·조언을 거쳐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 개선, 실행 방안 등의 정책을 발굴,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도내는 물론 수도권, 정부 산하기관 등의 다양한 민·관·산·학의 분야별 전문가로 33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는 총 3개로 정책분과 10명, 빅데이터분과 13명, 인공지능분과 10명으로 꾸러졌으며 분과별 정기·수시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데이터산업 추진 현황,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강원자치도는 2033년까지 지금보다 3배 성장한 디지털 종사자 3만명, 디지털기업 3,000개, 매출 300%성장을 목표로 한 ‘333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강원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국내 최대의 데이터센터 및 산업 집적단지 조성, 데이터산업의 원유로 평가받는 국내 최고 의료 및 융합 빅데이터 구축, 창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기업 맞춤형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기간산업의 디지

털 융합 및 도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 등 4대 분야, 10개 과제, 46개 단위시책을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이어 공동위원장에 최용 인컴즈 자문역을 선출했다. 이어 정책분과 위원장에 손경호 강원대 AI융합학과 학과장, 빅데이터분과 위원장에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과학연구처장, 인공지능분과 위원장에 백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총괄본부장을 각각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관·산·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산업 수도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신속하고 혁신적으로 진행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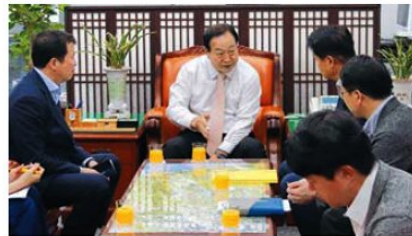
“GTX-B 춘천 연장·철원~연천 전철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기호 의원 국토·행안부 간담회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 요청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울) 국회의원이 19일 국방위원회 위원실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적극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토부 철도국에 GTX-B 춘천 연장을 비롯해 경원선 복원, 경기 연천~철원 월정리 전철화, 경기 포천~강원 신철원 철도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GTX-B 춘천 연장은 4,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600억원대로 낮아진다.

이날 국토부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와의 간담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춘천 소양8교, 접경지



◇한기호 국회의원은 19일 국방위원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역 초광역권 도로 연결, 동서고속화철도 인근 지역활력화 사업, 철원 갈말 LPG 배관망 조성, 한탄강 대관람차 조성사업,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양구 펫토피아 조성 등 강원자치도가 원하는 사업을 대폭 반영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더욱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종합 04면

강원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철원서 또 ASF 확진 '비상'

올해만 두 번째 농민 불안 고조
집중호우로 야생멧돼지 주변 오염
인근 농가 25곳 추가 발생 우려
도 "오염원 제거 확산 방지 최선"

강원도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인 철원군에서 올해 세 번째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난 2월 양양군에서 ASF 농가 내 확진이 발생한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철원군 갈말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어미돼지 도축장 출하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한 21마리 중 3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68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같은 철원지역의 2개의 가족농장이 위치해 있다. 2개의



철원군 갈말읍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19일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족농장에도 총 6684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에 동물방역과 통제관과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소

독, 역학조사, 긴급 살처분, 매몰작업 등을 빠르게 마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양돈농가 내 ASF 발생건수는 총 15건(철원 3건, 화천·인제·홍천·춘천 각 2건, 영월·고성·양구·양양 각 1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철원이 도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철원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돈농가 수는 이번 확진 농가를 포함해 총 61곳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으며 사육두 수도 14만504마리에 달한다. 더불어

이번 확진 농가 방역대 10km 내에는 25개 농가가 위치해 있고 5만7194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철원의 경우 지난 1월에도 올해 첫 도내 ASF 농가 발생이 있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지역 내 확진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 양돈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철원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5)씨는 "올해 초에도 ASF 확진이 1건 발생하면서 출하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확진 판정을 받아 농가 입장에서 당황스럽다"며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 농가 입장에서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야생멧돼지 발생 주변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 오염원 제거 및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지역 10면

춘천 100년 역사 담긴 '망대' 역사 속으로

약사축진4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조망권 침해 철거 불가피

시, 모형 설치 문화재생공간 조성

보존방안 연구 필요성 제기

100년 역사를 간직한 망대(사진)가 사라진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망대 주변지역으로 146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망대는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약사축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일환이며 올해 하반기 사업 시행인가 신청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2~3년 후에는 망대가 철거될 것으로 춘천시는 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약사축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법적공방 끝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 한 가운데 있

약사축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위치도



는 망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망대 자체가 언덕을 포함해 지상에서 30m 높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경우 특정 세대의 조망권,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망대 역시 운명을 다하게 됐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망대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 일제강점기 탈옥수와 화재를 감시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1981년 춘천교도소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부터는 마을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화재경보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6·25 피난민들과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망대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망대 마을을 이루었다. 양구출신 박수근(1914~1965) 화백이 머물렀고, 춘천고를 졸

업한 조각가 권진규(1922~1973)가 3년간 하숙한 장소로도 유명하다.

춘천시는 망대의 역사성을 감안, 망대의 모형을 본 따 인근에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재생공간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3일에는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약사동 역사문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어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감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망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지숙 시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가치가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망대를 지키면서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지역 11면



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전영록)는 19일 원주시청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시가도에 제기한 옛 종축장 부지의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제안을 공개 지지했다.

이·통장연합 도지부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지지

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전영록)는 19일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한 원주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의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이통장 도지부는 이날 원주시청에서 가진 정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강원 오페라 하우스가 628년만에 재탄생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도 모와 더불어 첫 문화융성 자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 표명은 도내 18개 시·군 주민을 대표해 지회장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영록 지부장은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소외된 강원도에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된다면 강원 남부권 뿐 아니라 인근 충북 북부권, 경기 동부권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 문화시설이 될 것"이라며 건립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기영 mod1600@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릉시 관광·신산업 거점 기대

-도청 제2청사운영 계기 인구·산업 확대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과 함께 강릉시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원 '빅3' 도시중 한 곳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어, 도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 동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을 추진할 중심 도시로서 책무도 떠안고 있습니다. 동해안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제적 명품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와 지역의 비상한 전략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는 지금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은, 물류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기폭제로 평가됩니다. 2시간대에 부산과 연결되는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여기에 강릉삼척 고속도로 추진을 통해 도내 교통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강릉 간 KTX 운행으로 관광 유동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수도로서 입지를 다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은 주목할 만한 호재입니다. 2026년까지 구정면과 강남동 일대에 조성될 단지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및 천연물바이오 산업이 육성됩니다. 또한 세라믹 연계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도 예상됩니다. 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 유출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산업 위축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강릉시 총 인구가 21만 456명으로 집계돼, 빠르게 올해 안으로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릉이 관광과 신산업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동 인구 증가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도청 제2청사 이전을 계기로 상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본격 추진돼야 합니다. 마침 20일 강릉시와 본지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강릉시의회가 후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개막 제2청사 개청-강릉 발전 전략 포럼'이 강릉원주대에서 개최됩니다. 강릉시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인근 시군을 비롯한 영동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사설/칼럼 19면

구조 자격 없는 안전요원, 안전불감증 아닌가

우리 국민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며 트라우마를 겪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에서 허술한 방역체계를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었다. 애써 진정시킨 불안심리가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원지역 계곡과 유원지에 배치된 물놀이 안전요원의 평균 연령대가 60대에 이르면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요원의 평균 연령은 58.4세로 지자체별로는 정선이 63.2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천·횡성(63세), 춘천(62세), 원주·강릉·평창(60.9세) 등 6개 시·군의 평균 연령대 또한 60대 이상이었다. 더욱이 전문 구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안전요원은 도내에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받는 사전 구조 교육 또한 소방서와 연계해 당일치기로 진행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전관리요원들이 활동하는 계곡이나 유원지 등 내수면 지역은 해수욕장보다 구조·구급 작업이 더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국가의 역할이며 자치단체의 책무다.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개발해 주민과 함께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소명이다. 안전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훈련으로 돌발 상황 대처 요령이 몸에 배어야 한다. 사고 예방 대책과 훈련이 말단의 실패끝까지 철저하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했다면’이라는 안타까운 가정이 등장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정 강원자치도가 안전의 사각 지대가 돼선 곤란하다. 안전 대책을 다잡을 일이다.

도내 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지리적으로 사고 응급 대처가 용이하지 않는 곳이 널려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집행력을 보여야 한다. 정말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안전은 좀 더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인식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기본에 충실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아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시스템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일은 그다음이다. 안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피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포트홀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도로 관리에 바짝 신경 써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3년 07월 20일 (목)

사설/칼럼 19면

경제성 입증 GTX-B 춘천 연장, 국비로 추진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춘천 연장을 판가름할 연구 용역 발표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미래 강원 2032'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시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첫 관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춘천 연장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당초 6월 완료로 목표로 용역이 진행돼 온 만큼 최종 검토 단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서북부지역의 수도권

연결을 강화할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국비 반영을 위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사활을 걸고 있다. GTX-B 춘천 연장은 4,3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돼 조속한 착공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통합 기획안에 춘천 노선이 담길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이 확실시된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 앞서 춘천시가 경기 가평군과 공동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비용대비 편익(B/C) 값은 1.12로 나타났다. B/C 값이 1을 넘는 투자사업은 경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를 확보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내야 할 몫은 600억원대까지 낮아진다. 만약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춘천시와 가평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각각 들여야 한다. GTX에 투입되는 EMU-180은 1대당 170억원가량이다. 일일 92회를 운행할 경우 차량 12대, 2,040억원이 소요된다. 총 사업비는 5,000억~6,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춘천시와 가평군이 3,000억원씩 분담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도와 춘천시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GTX-B 노선 춘천

연장은 이번에 반드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춘천과 홍천, 양구, 화천 등 강원 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

한국교통연구원 GTX 확충 용역 마무리 단계 춘천·가평 사전타당성 조사 B/C 1.12 나와 지역 역량 모아 국가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GTX-B 노선은 하루 92회 운행을 기준으로 출퇴근 등으로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는 7분30초 간격으로 열차가 출발한다.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도착한다. GTX-춘천의 운행 횟수 감소 및 열차 지연을 막고 사실상 수도권과 생활권역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도와 춘천시가 국토부와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등을 찾아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도민 등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20일 (목)

사설/칼럼 19면

산사태 1%의 가능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

-기상당국 예보능력 높이고, 지자체 지속적인 위험지역 발굴을

지난 14일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구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6일부터 계속 낙석이 발생하는 바람에 정선군이 7일 오전부터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던 곳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차량이 통행 중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도 경북의 지형과 비슷해 언제나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청은 잠시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다고 했지만, 주말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지역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장맛비로 약해진 지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선군이 정선읍 봉양리 관음동마을 지역 주민 15명을 긴급 대피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

치였습니다. 정선군이 피암터널을 미리 통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대응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해 6월 기준 2892곳으로 경북(4935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강원도내 피해 건수도 총 277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556건)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정선지역과 같이 깊고 좁은 지역에 갑자기 내리는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만, 때론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당국의 예고능력 향상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위험지역 발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선관음동마을 사례와 같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산사태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도 필요합니다. 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 해소하는 길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빈틈없는 대응을 촉구합니다.